산업용 전기요금 2003년 2-3% 인상

산자부, 1단계 전기요금 개편안 2003년 1월 시행 … 농사용은 제외

정부가 200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1단계 전기요금체계 개편에서 산업용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고 일반·주택용은 소폭 인하하되 농사용은 일단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산업용은 2003년 2-3% 가량 인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매년 조금씩 올려 모두 10% 가량 오르게 되고, 가정용과 일반용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8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체계개편 연구를 토대로 부문별 공청·토론회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산자부 기본입장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관계부처 공식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 이내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200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자부의 기본입장에 따르면, 주택·일반·산업·농사용 상호간에 교차보조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특고압, 고압, 저압 등 전압별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제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척도에 맞춰 전환키로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당초 2004년까지 5.3%와 5.4%씩 2차례에 걸쳐 10% 가량 인상할 것을 제안한 산업용은 산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되 전력 사용시간 및 패턴을 반영한 다양한 선택요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은 2003년 2-3% 올리기로 방향을 결정했고, 당초 누진제 완화 등을 통해 2년여에 걸쳐 8% 가량 내릴 예정이던 주택용과, 단계적으로 20% 가까이 인하될 예정이던 일반용은 산업용 인상폭에 연동돼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제조업의 평균 원가비중이 1.6%인 점을 감안할 때 산업용 요금을 1% 올릴 때마다 원가 부담이 0.016% 상승하는 만큼 산업계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산업용 인상에 따른 일반·주택용 인하는 우선 주택용 인하에 우선순위를 두되 일반·주택용의 2003년 인하폭은 2-3%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사용은 갑종 가운데 논농사에 물을 대는데 쓰이는 관개용 양·배수시설로 제한하고 현재 적용중인 을종(육묘·전조 재배), 병종(밭작물 재배 및 축산·양어장용) 등은 공급원가에 가깝도록 인상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대폭 인상이 예상됐지만 1단계 개편에서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농사용에 대해서는 향후 개편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되 전기사업자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농업정책 및 사회보장정책의 틀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06>